

9·9 김정일新체제 출범 이후의 남북 경협 동향

임을출 / 한겨레신문 북한전문기자

9월에 접어들면서는 김정일 신체제 출범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기업인의 대거 방북이 이뤄지고, 시범적으로나마 투자 성과도 가시적으로 드러나 남북 경협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잔뜩 기대를 모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남북 경협은 또 다른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었고 기업들의 대북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애초 9월 25일이나 늦어도 10월 초순에 첫 유람선을 띄우기로 했던 현대그룹은 북쪽과의 추가 투자 문제 등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끝내지 못해 10월 중순 이후로 첫 출항을 미룬 상태이고,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모집한 150여 개 업체의 나진·선봉투자포럼 참여도 북쪽의 방북 초청장 발급 거부로 무산됐다. 경협 협의 목적의 기업인 방북이나 북한 주민 접촉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쪽이 아무리 전향적이고 일관성있는 남북 경협 정책을 편다해도 북쪽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혹독한 구조 조정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대남 경협 현장

북한이 이런 일련의 소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보다는 내부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해 당분간의 조정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정권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을 전후해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과 대대적인 정부 조직과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서 대남 경협 관련 조직과 인사의 개편도 예외없이 이뤄졌다. 특히, 나진·선봉경제특구에의 한국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된 조직과 인원이 크게 바뀐 것이 특징이다. 남쪽 기업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회 위원장을 비롯해 나진·선봉에 파견됐던 실무 국장과 과장 등 상당수 인원이 외환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처형되거나 유배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때 능통한 외국어 구사와 실무 협상 능력을 인정받아 급부상했던 대남 경협 창구의 한 사람인 김문성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도 비리 연루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4일부터 사흘간 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 열렸던 나진·선봉투자상담회에 한국 기업의 집단 방북이 무산된 것도 일련의 이러 조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 조치는 남쪽 기업인들의 방북과 접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진행되는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해 외환이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 기업인들이 방북이나 접촉을 할 때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는 각종 비용은 현금으로 건네진 탓에 북쪽 관계자들의 중간 착복은 지극히 용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북쪽 대남 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중간에서 달리를 챙기는 방법도 다양해짐과 동시에 교묘해져, 북쪽의 사정 당국에서는 불시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외환 통장이나 현금을 찾아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 진행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부문까지 철저히 자금의 유출입과 차액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대남 경협 실무 종사자에 대한 북한의 이런 강경 조치는 투자 유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과 후임자들이 이런 선례를 밟지 않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기가 불가피한 남북 경협 현실

북한이 지난 9월초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나 내각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대남 경협 관련 조직이 일부 없어지거나 재정비 중에 있는 현실도 남북 경협 목적의 기업인 접촉이나 사업 추진이 미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가 경협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남 사업의 창구로 더욱 굳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간 이 조직에는 경협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어 주로 정치적이거나 문화, 종교, 학술, 교류 등의 분야에서 남쪽 인사와 접촉해 협의하거나 사업을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무역이나 대외 경협 분야에서 그나마 잔뼈를 키워온 인사들이 대거 아태위쪽으로 옮겨왔다. 말하자면, 아태위가 민간 차원의 전반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태위가 하나의 정교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기 보다는 당쪽이나 군부, 내각 등에서 파견나온 인사들이 섞여, 원래 소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남쪽과의 편리한 협상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 내세우는 테스크포스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의 옛 통상산업부격인 대외경제위원회는 폐지됐고,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과 미수교국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산하 조직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존속 혹은 개편 여부는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편 과정

은 필연적으로 인사 개편으로 이어져 더러는 과거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지만 남북 경협 과정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중하위직 인물들이 급부상해 중책을 맡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새로운 젊은 인물들이 남북 관계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남쪽 기업인들을 상대해왔던 북쪽 관계 실무자들의 말로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의식해 기업인 접촉에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정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는 등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남쪽 기업인들을 회피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의 조정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남북 경협 현실을 미리 예상해 해주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월 31일 발사한 자칭 인공 위성 발사 사건도 남북 경협 분위기의 경색을 초래하는 데 한 몫을 했다. 북한은 그들대로 인공위성 발사는 민족적인 경사로 남측에서도 같이 축하할 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남쪽 당국이 인공 발사에 대한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열중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해 대북 제재 운운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북한은 정권 창건 50주년 기념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시키느라 남쪽과의 경협 문제 등은 다시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나진·선봉 투자 유치 꾸준히 지속

어쨌든 북한은 남쪽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면서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공동 주최한 나진·선봉투자상담회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등 7~8 개 국가의 기업인 및 연구 기관 관계자 89 명을 초청, 행사를 무사히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계약 규모는 지난 1996년 실적에 크게 못 미치는 1억 달러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입수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 기업 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2월까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모두 7억 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111 개 사업의 외국 투자 계약이 체결됐으나, 실제 투자는 77 개 프로젝트에 5,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실적에 유엔개발계획(UNDP) 투자분 300만 달러, 개인 투자분 150만 달러 등을 합치면 실제 투자액은 6,242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지대에 설립이 허용된 기업체는 모두 121 개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등록 투자 회사는 86 개다. 이 가운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회사는 42 개에 달한다. 또 지난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 이래 지난해 말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일반 관광객 5,810 명을 포함해 모두 4만 명으로 집계됐다. 외국 기업의 투자

업종을 보면, 농업, 임업 등의 1차 산업을 비롯해 석유 정제, 직물, 운송 기계, 통신, 금융, 건설 및 부동산 투자, 호텔 등 2차,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18 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진항에 집중 투자가 이뤄져 1997년 한해에만 3,100 개의 컨테이너와 17만 톤의 벌크선 화물이 처리됐다고 앞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갈수록 소진되고 있는 남쪽 기업의 대북 투자 여력

북쪽의 이와 같은 복잡한 사정 못지 않게 남쪽의 내부 사정도 남북 경협의 위축을 거두고 있다. 국내 30대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도 급격한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북한에 투자할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해외에 투자해놓은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도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다 싼 값으로 매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전망이 불투명한 중장기적인 대북 진출보다는 홍보 효과가 크거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소규모 대북 투자에만 관심의 눈을 돌리는 뚜렷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쪽에서 대남 경협 조직과 인력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간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북 투자를 모색해보겠다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속초 - 나진간 카페리 항로 개설도 지연

속초와 북한 나진간의 카페리 항로 개설도 사업성 저하로 인해 개설 일정이 크게 늦춰지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초 속초-나진 항로는 신변 안전 보장 문제 등으로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져왔으나,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깊이 개입해 조기 개설을 유도하고 있고, 금강산 유람선 관광 합의 과정에서 여러 현안이 타결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카페리 항로 개설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는 달리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실현될 경우 오히려 관광객이 나진·선봉보다는 금강산쪽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난 7월 인천과 중국 단둥간 직항로도 개설되고, 극심한 내부 경제난에 따른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항로 개설 추진 초기에 비해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계절적 요인으로 볼 때도 카페리 운항은 겨울 결빙 등으로 사업 기간이 5 개월에 불과한 데다, 카페리의 특성상 화물과 여객 수요도 부진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속초-나진 항로는 남북한과 중국 등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금강산 유람선 관광 사업이 완전히 매듭된 뒤 본격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 무역 형태의 대북 투자 활기 띠듯

9월 중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협력 사업(자) 승인도 단 한 건에 그쳤다. 정부는 15일 나진·선봉경제특구내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 지역내 백화점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화국제그룹(대표 나정주)에 대해 경제 분야 남북 협력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서 10월초 현재 경제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모두 36 개로 늘어났으나, 협력 사업 승인 기업은 8월말 정부로부터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북한 부동산 개발(임대, 분양)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인 코리아랜드를 포함한 12 개 업체 그대로 남게 됐다.

성화국제그룹은 북한의 '조선류경무역회사'와 합영으로 나진·선봉지대내 중국·북한 접경지인 원정리에 북한쪽이 제공한 30만 평방미터의 대지에 1만 5,000 평 규모의 시장 건물을 건설한 방침이다. 성화그룹은 1차 시설 투자로 약 100만 달러를 들여 1,500여 평 건물을 지은 뒤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각종 상품을 구상 무역 형식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성화그룹은 특히 각종 포장 및 상표 제작을 위한 설비와 원자재의 투자를 통해 상품 포장 디자인 및 포장 기술을 이전하여 선진국 수준의 상품을 생산할 준비도 갖출 계획이다.

또 성화그룹은 평양을 방문하는 관광객

들에게 만족할 만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생산된 각종 우수한 특산품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과학적이고 품위있게 포장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높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과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들을 엄선해 주문자상표(OEM)를 부착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갖추어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고급 백화점을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평양시 중구역에 세워질 성화국제백화점 공동 운영을 위해 북한쪽에서는 약 1,000 평 규모의 신축 완공된 고급 건물을 투자하고, 성화그룹쪽에서는 90만 달러 상당의 내부 치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50만 달러 이상의 상품을 교역 형식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참고해야 할 특이한 흐름은 북한이 최근 남쪽과의 각종 투자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구상 무역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쪽 기업의 현금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해 제기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국내 유희 설비 등의 대북 투자에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남북 경협은 남북한 서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경협 확대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루한 조정 국면을 거듭 겪고 있다. **김**